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국제부
발 신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담당: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전은경 간사, 02-723-5051, pspdint@pspd.org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010-5574-8925, khis21@hanmail.net)
제 목 [보도자료] 홍콩 경찰 폭력 진압 규탄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날 짜 2019. 10. 04. (총 8 쪽)

보도자료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일시·장소 : 10. 04. (금) 오전 11:00, 광화문 남측 광장

1. 오늘(10/4) 오전 11시, 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6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와 재한 홍콩인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콩 정부가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이자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지난 1일,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에게 근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한 홍콩 경찰을 강력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그동안 꾸준히 비판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밝히고 이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조사 결과 이날 경고사격으로 알려졌던 사격 중 3발이 실은 시위대를 겨냥해 발사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이는 또 다른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었던 끔찍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더불어 이날 시위에서 경찰의 고무탄에 맞은 언론인이 결국 실명한 것은 홍콩 경찰의 폭력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시위가 격화되는 이유가 최루탄과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 실탄 경고 사격 등 경찰의 과잉 대응 때문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경찰의 과잉 대응에 대한 독립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정부가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 없는 석방과 불기소,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4. 한편,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홍콩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 의미로 홍콩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검은색 옷을 입고 참석하였다. 참가자들은 이후 영문 성명을 홍콩의 시민들과 주한 중국 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 발언1 : Fanny (한국 기독교학생회 국제부 활동가, 재한 홍콩인)
- 발언2 :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 발언3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류다솔(민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전은경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활동가)

▣ 붙임1. 기자회견문(국문)

▣ 붙임2. 기자회견문(영문)

홍콩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홍콩 정부는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중국 건국 70주년 국경절인 지난 10월 1일, 홍콩에서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행사가 있었던 이날, 시위 참여자인 중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경찰의 실탄에 맞은 것이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시위대와 대치하던 중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실탄을 발사했고, 총에 맞은 학생은 탄환 적출 수술을 받는 중상을 입었다. 이날 경찰은 이 지역 외에도 곳곳에서 실탄 경고 사격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콩 경찰은 실탄 발포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시위대를 ‘폭도’로 규정하고 “당시 경찰관들은 시위대에게 포위돼 공격을 받는 상황 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강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꾸준히 비판 받아 온 홍콩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력 진압, 과잉 대응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다. 심장에서 불과 3cm 벗어난 가슴을 정면 가격한 홍콩 경찰의 실탄 발사는 그 어떠한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공격적인 행위였다.

우리는 홍콩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경찰이 즉시 사과하고 이 사건을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을 중단하고,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 공식 철회를 밝혔지만, 홍콩 시민들은 송환법 공식 철회, 경찰의 강경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체포된 시위대의 조건 없는 석방 및 불기소, 행정장관 직선제 실시의 5대 요구가 모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시위대의 규모가 줄긴 했지만 홍콩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위한 시위에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홍콩 경찰의 과도한 폭력 진압과 집회·행진 금지로 홍콩 시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심각하게 탄압받고 있다. 100만 명이 모인 지난 6월 9일 시위 이후 현재까지 경찰에 체포된 시위 참가자 수는 1천 명을 훌쩍 넘어섰고, 지난 10월 1일 시위에서만 66명이 부상을 입고 18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진압봉을 휘두르고 최루탄을 쏘는 등 무차별적으로 진압했고, 물대포 발사, 특공대 투입에 이어 실탄 경고 사격까지 과도하게 대응한 바 있다. 시위가 격화되는 것은 경찰의 이러한 과잉 대응 때문이다.

더이상 홍콩 시민들의 분노에 폭력으로 답해서는 안 된다. 홍콩과 중국 정부는 송환법 철회 이후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시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이유를 직시하고, 자발적으로 거리로 나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체포된 시위대에 대한 조건없는 석방과 불기소, 경찰의 강경 진압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 뿐만 아니라 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백색 테러’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기본권인 의사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는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부상 당한 학생을 비롯하여 모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빌며,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홍콩 시민들의 저항에 다시 한 번 연대의 뜻을 전한다.

2019년 10월 4일

홍콩 시민들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평화의친구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청년유니온, 구속노동자후원회,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 행동, 국제민주연대, 군인권센터, 노동당 성북당협, 노동자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이얼로그차이나 한국대표부, 동북여성환경연대 초록상상, 동아시아 사회운동 공부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발전대안피다, 사단법인 아디, 사단법인 오픈넷, 사단법인 전남마을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회복적정의협회, 사단법인희망씨, 생명안전 시민넷,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에코붓다,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천인권영화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 국제연대 당원모임, 제주다크투어,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중랑녹색당, 중랑마을넷, 중랑희망연대, 참여연대, 천주교 남자수도회 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충남대학교성소수자동아리RAVE,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피스모모,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한국기독교학생회총연맹 (KSCF),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평화교육훈련원, 한국YMCA전국연맹, 해외주민운동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NCKK 인권센터 (총 65개 단체)

The Hong Kong Government Must Stop Indiscriminate and Violent Crackdown and Ensure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n October 1, the 70th National Day of China, a tragic incident occurred in Hong Kong. On the day that a "Day of Mourning" event was held in honor of those killed by state violence, a highschool student who participated in the demonstration was shot by police. According to the released footage, the Hong Kong police fired live ammunition from a very close distance while confronting protesters, and the student had to undergo bullet extraction surgery. On the same day, the police allegedly fired live ammunition for warning in other areas as well.

The Hong Kong police have admitted to firing live ammunition, but have not made a formal apology. Rather, it is known that they defined the protesters as 'rioters' and argued that "police officers at the time felt the threat of life in the situation besieged by protesters and attacked". The incident is a shocking reminder of the indiscriminate and violent crackdown and the excessive response of the Hong Kong police that have been criticized steadily. The live-fire of the Hong Kong police, which hit the chest just 3 cm away from the heart, is an aggressive and unproportional act that cannot be justified by any word.

We seriously deplore about the violent crackdown by the Hong Kong police, and we urge the police to apologize immediately and investigate the incident. Also, we urge the Hong Kong police to stop violent crackdown on the protests and to ensur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lthough the Chief Executive of Hong Kong has announced the officia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Hong Kong citizens declared their position of continuing their protests until all of the five demands for the official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are accepted. The five demands are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harsh crackdown of the police the withdrawal of defining the protesters as 'rioters', the unconditional release and non-prosecution dispositi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the direct election of the Chief

Executive are accepted. Despite the reduced scale of the protesters, many citizens are still actively joining the protests for Hong Kong's future and democracy. Amid this situation, Hong Kong citizen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are severely suppressed because of the Hong Kong police's excessively violent crackdown and ban on rally and march. Since the June 9 protest, which drew 1 million people, the number of protesters arrested by the police has exceeded 1,000, with 66 injured and 180 arrested in the October 1 protest alone. Until now, the Hong Kong police have quelled the protesters indiscriminately by wielding riot rods and firing tear gas and responded excessively by using water cannons, special forces, and even warning shots of live ammunition. The intensification of the protests is due to such excessive responses by the police.

The authorities should not respond to the anger of Hong Kong citizens with violence anymore. The Hong Kong and Chinese governments should face up to the reasons why citizens' call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continues even after the withdrawal of the extradition bill, and listen to the voices of citizens who are taking to the streets voluntarily. Prompt response on the government level to the "white terror" which is taking place against citizens who participated in the rallies, as well as the unconditional release and non-prosecution disposition of arrested protesters and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into the harsh crackdown by the police, is urgently required. During the process,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and demonstration should be ensured above all. Korean civil society organizations pray for the quick recovery of all wounded, including the wounded student, and send the message of solidarity to Hong Kong citizens' resistanc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October 4, 2019

The statement is endorsed by 65 South Korean NGOs:

Activists group for Human Rights 'BARAM

Against Sexual-minority Discrimination_S.Korea RAINBOW ACTION

Asian Companions Against Brutality

Asian Dignity Initiative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Catholic Human Rights Committee

Center for Military Human Rights Korea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Committee of Justice, Peace and Ecology Catholic Superiors of Men Religious
Committee to Support Imprisoned Workers
Dasan Human Rights Center
Dialogue China, 對話中國
Eco green sangsang
Eco Buddha
Ecumenical Youth Council in Korea
Friends of Peace
GJYOUTHUNION
HOPEC
Human Rights Center of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Human Rights Education Center _ DEUL
Human Rights Movement Space Hwal
Hyungmyung Foundation
Incheon Human Rights Film Festival
Incorporated Organization Silcheon Bulgyo
Jeju Dark Tours
Jeju Peace Human Rights Institute WHAT
jeonnam-maeul-network
Jesuit Research Center for Advocacy and Solidarity
Jungnang Community Network
Jungnang Green Party
Jungnang Hope Solidarity
Korea Association for Restorative Justice
Korea Peacebuilding Institute
Korea Women's Associations United(KWAU)
Korean Confederations of Trade Unions(KCTU)
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orean House for International Solidarity
Korean Lawyers for Public Interest and Human Rights (KLPH)
Korean Solidarity for Overseas Community Organization
KSCF
Life & Safety Network

Migrant workers movement supporters group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International Solidarity Committee
National Council of YMCAs of Korea
Open Net
Palestine Peace and Solidarity in S.Korea
PEACEMOMO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PIDA(People's Initiative for Development Alternatives)
RAVE
Sarangbang group for human rights
Seogyo Int. for Humanities & Social Science
Seongbuk branch of Labor Party, South Korea
Seoul Human Rights Film Festival
Society of International Solidarity in Justice Party
Solidarity for Another World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Solidarity for Peace & Human Rights
Solidarity for the Peace and Human Rights of Asia
Study Group for East Asia Social Movement
Supporters for the Health And Rights of People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Won Buddhism Civil Society Network Temple
Won Buddhism Eco Network
Won Buddhism Human Rights Committee
Workers' Solidarity